

북한의 두 개 한국 주장과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박인휘(이화여대)

올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매우 낮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북한이 소위 ‘두 개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물론 ‘남북한 각자 따로 살자’는 북한의 기존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대남 통일전선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의 설정을 예고한 셈이다. 북한 주장의 논리적 결함은 뒤로 하고, 만 28세 약관의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유일한 배경은 김일성의 손자이자 김정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선대의 후광과 업적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사업’을 제일의 미션으로 여겼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을 포기하는 건 일견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이 다른 속내를 차후에 드러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다. 하지만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성일의 생일 ‘태양절’(4월 15일)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두 개 국가’ 주장에 담긴 북한의 진심을 짐작하게 되었다.

현재 개인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체로 세 가지 차원으로 진단하고 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여하한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배경이 있다. 북한은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한국 문화의 북한 내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대남 적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다른 별개 국가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봉쇄하고,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도 최초 단계에서부터 무력화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는 상황보다, 한국이 별도의 적대 국가가 되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의미를 가진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남한을 향해 핵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핵무력 사용 가능성의 논리적 완결성을 더욱 정교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군사력 우위에 맞서 북한 스스로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지켜내는 역지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셋째, 현재의 러우전쟁과 중동 사태와 같은 국제 안보 불안정성을 활용하여 북한의 외교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를 통해, 동북아 안보 구조를 악화시킴으로써, 북중러 삼자 연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북중 및 북러 관계에서, 대한민국과 무관한 북한의 독립적인 지위는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외교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생존 공간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은 오랜 침묵을 뒤로하고, 지난 2월말 이후 서방 외교관들을 북한으로 초청하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 수년간 폐쇄했던 북한의 해외 주재 외교관을 다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닫혀있었던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최근 공식적으로 업무를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북한의 외교 무대 복귀는 속속 예고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 외교관을 다시 대면하게 될 국제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 할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북한의 새로운 대외 노선에 맞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과 노력도 더욱 위중해 지고 있다. 우리가 과거 YS 시절인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듯이, 표현이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북한은 올 해를 북한 버전의 ‘글로벌 조선’으로 설정했다는 해석까지 가능해 보인다.

지난 6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전격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의 이 번 방문은 24년만에 이뤄진 러시아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이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표현만 다를 뿐 ‘북러 군사동맹’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올 초 시점의 예상보다는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가능성 또한 점쳐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 노선 전환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깊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필자는 동북아가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과거 냉전기와 달리 남북한 사이의 국력 격차가 너무도 큰 현실을 고려할 때, ‘냉전’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경쟁’적 차원의 관계 설정이 이제는 더 이상 남북한 사이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더구나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현실에서, 북한은 관례대로 국제안보 불안정성을 자국의 안보 이익 극대화론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두 개 국가' 논리가 한반도 수준을 넘어서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리적, 학문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은 시급해 보이기까지 한다.

'한미일 협력'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협에 직면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쟁의 와중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중국의 경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 연대가 강조되는 국제질서에서, 더 큰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한 북한의 존재 가치를 매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은 '적대 관계의 극대화'를 통한 북한 외교의 자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주장은 우리가 거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지켜보면서, 북한은 '두 개 국가' 논리를 통해 한국과 더욱 더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중요성 및 글로벌 차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거 유럽 전체가 고민했던 '독일 문제(German Question)'처럼, 국제사회가 '한국 문제(Korean Question)'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 전략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 논리와 인태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강조가, 우리와 다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복잡한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차원의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어젠다-세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 및 경제적으로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들을 한반도 문제의 다양한 참여자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교전략, 이러한 전략의 발굴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를 우리의 든든한 통일 지지자로 만들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 저자: 박인휘_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7월 2일
“북한의 두 개 한국 주장과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979-11-6617-711-2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